



보상 격차 해소 요구하는
삼성전자 DX 노동자들
5면

이익공유제
논란
6면

노동자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맞서
같은 편인가? 7면

중국 탄광
참사
10~11면

이탈리아 기층 노조들,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
11면

레바논 전선
12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 2면



성과급도 임금 형태다

성과급 투쟁 정당하다

관련 기사 3, 5~7면

한화에어로 작업장 폭발 참사

노동자 안전을 제물로 '죽음의 상인' 노릇 하는 K-방산

임준형

6월 1일 오전 11시경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났다. 부상자 중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다.

사망자 중 2명은 입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들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폭발의 위력이 어찌나 컸던지 해당 건물은 전소했고, 안타깝게도 사망한 노동자들의 시신은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천무, 천궁-2 등 미사일과 로켓의 추진체와 연료를 개발·생산하는 핵심 거점이다. 참사가 난 56동 건물은 이 과정에 쓰인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곳이다. 특히 미사일 고체연료는 점성이 높고 폭발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한화 측은 이 공정이 위험도 낮은 공정이라며 면피하려 한다.

빠져나갈 구멍

그러나 6월 2일 한화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명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장은 이렇게 일갈했다.

“위험한 작업이 아니었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화약을 취급하는 곳은 어디든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회사는 벌써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5명이 죽고 건물이 날아갔을까.”

김명기 지회장은 최근 군수 산업의 수출이 늘고 참사의 배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업이 잘 되니 사측은 ‘표

준화’를 한다면서 노동 강도를 높였습니다. 국내 판매는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는데 수출은 원가 절감한 만큼 바로 이윤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 강도가 세지고, 안전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세척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해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준근 KAIST 교수는 “고성능 미사일을 새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사고 위험이 커졌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조선일보>> 6월 2일 자)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는 한화 측이 교섭대표노조인 자신들을 만나 주지 않고 있다며 참사 원인 조사 과정에 노조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참사가 난 대전사업장뿐만 아니라 창원·여수·보은 등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대전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는 한국노총 전국화학연맹 한화노조도 1일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 측은 ‘방위 산업이라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작업 공정과 사용되는 화약의 종류 등에 대해 공개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제약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살상 무기 기술 유출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노조법 제41조 2항은 군수기업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군수기업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알더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를 압박할 수단이 상당히 제약돼 있는 것이다.

기밀에 부쳐지는 사항 없이 참사의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켜야 할 규정도, 보고해야 할 의무도 없는 '특별한' 작업장

반복돼 온 한화의 사망 사고들

대전사업장은 이번 참사 전에도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반복돼 왔다.

2018년 5월에는 추진체에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참사 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486건이 적발됐는데, 그중 266건이 공정안전관리 문제로 드러났다.

이후 9개월만인 2019년 2월 추진체에서 고체연료를 분리하는 작업 도중 또 폭발 사고가 벌어져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망한 3명 모두 20~30대 청년이었다. 정전기를 흘려보내는 접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폭발의 원인이었다.

두 번째 참사 이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에서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2건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당시 유가족들은 첫 번째 참사 후 제대로 된 안전 조치 없이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돼 또다시 참사가 벌어졌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화 측은 두 번의 참사 이후 해당 공정을 자동화했다지만 이번에 참사가 난 공정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56동 건물은 면적이 좁아 소방청의 안전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었다.

요컨대 직접적으로 문제가 벌어진 곳만 손을 보고 전반적인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방산 4대 강국”을 국정 목표로 내세웠고, 이미 지난해 이를 달성할 만큼 무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대대적인 군비 증강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도 이로부터 수혜를 입은 기업의 하나다.

한화가 생산하는 천궁-2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서 이란 미사일 요격에 사용되고 있다. 한화는 이스라엘의 3대 군수기업과 모두 거래하며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등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 학살에 일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이번 참사는 ‘죽음의 상인’인 한화가 자사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희생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6.3 지방선거 국힘의 추격, 범미준 민주당, 타협하는 진보당

★ 사회연대임금은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한다

성과급이 임금 아니라는 경총에 대한 반박

성과급도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이다

5월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발표했다.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영향으로 주요 대기업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이익 배분 제도화를 요구하는 투쟁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 하려고 나선 것이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은 투자, 고용, 연구개발에 쓰여야 할 경영 자원이자 주주의 몫"이라며,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체협상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총은 노조가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을 임금으로 간주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올해 2월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 성과급은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상,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총의 주장이나 대법원 판결은 기업 이익이 노동자의 노동과 상관없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가정한다.

그러나 투자한 자본이 이윤을 생산해 낸다는 신고전파 경제학(속류이면서 주류인 19세기 후반 이후의 경제학이다)의 주장은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일 뿐이다. 이윤이 별도로 정해지는 거라면, 자본가가 노동 통제에 매달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성과급도 임금이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기업 이윤은 노동자가 생산한 전체 가치 중 일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모두 임금이고, 이것은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다

부가 임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가치("잉여가치")를 자본가가 점유한 결과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어떤 명목으로든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성과급이나 기업 복지, 자사주 지급, '이익공유'라는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말이다.

이처럼 실제 지급되는 금품 전체를 임금으로 보는 관점은 노조법 등 노동 관련 법률에 일부 반영돼 있기도 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 대상을 명목상 '임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모두 노사 간 협의와 교섭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법원도 2018년 판결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했다.

한편, 경총은 '영업이익 대비 N퍼센트'라는 성과급 지급 명목을 이유로, 자본가의 권리인 이윤 획득을 노동자들이 침해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이익이든 당기순이익이든 노동자들이 성과급 기준으로 내세우는 지표는 결국 기업이 획득한 전체 부가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부가가치는 노동자들이 노동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생산될 수 없다. 따라서 성과급 인상 요구는 자본가의 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 중 임금 몫을 확대하라는 요구다.

성과급 인상을 포함한 모든 임금 인상 투쟁은 노동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자본가와 노동자가 어떤 비율로 나눌지 결정하는 분배 투쟁이다. 마르크스는 이 비율이 "싸우는 양측의 각각의 힘"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부랴부랴 특별 권고를 발표했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경총의 특별 권고를 따르고 싶지만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성과급을 최대한 받아야 한

다는 분위기가 이미 노동계급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이다.

이를 현실로 만들려면 노동자들은 힘을 보여 줘야 한다. 산업 전반에서, 그리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 할 것 없이, 투쟁한다면 그 힘은 더욱 커질 것이고,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몫이 확대될 수 있다.

강동훈

필독 도서

- 카를 마르크스, 《임금, 가격, 이윤》
- 카를 마르크스, 《임금노동과 자본》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노동당 우파의 영국 제국주의 지지 전통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가파르게 쇠락하고 있다. 명백한 주된 요인 하나는, 제러미 코빈이 당 대표였던 시절 그를 향해 악의적 비방과 모략을 하던 당내 우파 무리가 당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그들을 보며 과거에는 노동당 우파가 더 신사적이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1960년 노동당 당대회에서 일방적 핵군축 지지 결의안이 통과되자, 우파 소속 당대표 휴 게이츠컬은 언론과 손잡고 좌파를 맹공격했다. 게이츠컬은 심지어 노동당 국회의원 15명이 공산당 당원으로 의심된다고 보안국(MI5)에 그들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다.

노동당 우파에게 영국 제국주의는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었다. 최근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미터 램지 남작의 조사(弔詞)가 이를 확인시켜 준다. 그녀는 1기 토니 블레어 정부(1997~2001)의 차관이었고 스코틀랜드 노동당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그러나 램지의 진짜 경력은 비밀정보국(MI6)에서 일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민주 사회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거기서 일했다고 주장했다. 램지는 1950년대 후반 글래스고대학교에서 노동당 우파 활동가가 된 후 MI6에 채용됐다. 그녀와 생각이 비슷했던 동시대 인물로는 1992~1994년 노동당 대표를 지낸 존 스미스와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의 초대 수반인 도널드 듀어 등이 있다. MI6 역사가 스티븐 도릴에 따르면, 램지는 국제학생대회의 간사를 지냈는데, 그 단체는 냉전이 첨예하던 시절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위장 조직이었다.

**노동당 우파에게
영국 제국주의는 언제나
최우선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었다**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벌인 이라크 전쟁 노동당 우파의 제국주의 지지 전통은 뿌리깊다

램지의 조사들은 그녀가 MI6 핀란드 지부의 총책임자로서 1985년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정보기관) 내 영국 첩자 올레그 고르디에프스키의 소련 탈출을 도왔다고 주장한다. 영국 국가 관료 내의 뿌리깊은 여성차별 탓에 램지는 MI6 수장이 되지 못한 것 같다. 램지보다 먼저 MI6에서 일한 또 다른 여성 요원 대프니 파크도 마찬가지다. 그는 1960~1961년 벨기에령 콩고에서 일했다. 콩고가 독립하자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콩고 초대 총리 파트리스 루뭄바의 “제거”를 요구했고, 그 후 루뭄바는 잔혹하게 살해됐다.

MI6에서 은퇴한 후 램지는 노동당 우파 정치인으로 돌아왔다. 그 여성은 존 스미스가 1994년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외교 정책 보좌관이었다. 놀랍게도 2000년대 중엽 램지는 MI6 등의 정보기관을 감독한다는 의회 정보안보위원회의 일원이 됐다. 램지는 또한 블레어주의자들의 싱크탱크인 외교정책센터의 고문단의 일원이었다.

이런 경력을 보건대 “미터 램지가 2003년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기로 한 토니 블레어의 결정을 지지하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말한”(《텔레그래프》) 것은 놀랍지 않

다. 그 모든 살육과 혼란을 램지는 가치 있다고 여겼나 보다. 그녀가 ‘이스라엘의 노동당 친구들’의 상원 대표를 맡았던 것도 그리 놀랍지 않다.

그녀의 관계망은 노동당 우파와 영국 국가안보 기구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보여 준다. 이것은 단지 역사가들만의 흥밋거리가 아니다. 이런 배경에 비춰 보면, 2015년 노동당 당대표 선거에서 좌파이자 제국주의에 확고하게 반대해 온 경력이 있는 코빈이 이겼을 때 블레어주의자들이 얼마나 분노했을지 이해할 수 있다. 블레어주의의 도당은 코빈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리고 스타머로 교체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했고, 그 실상은 이제 폴 홀든의 책 《사기극》 등에 소상히 기록돼 있다.

썩어 빠진 노동당 우파

물론 노동당을 역사적으로 이런 연계로만 환원해서 규정할 수는 없다. 노동당은 노동조합 기구들이 당의 재정을 대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조직 노동계급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스타머 지도부 하에서 이런 연계는 갈수록 실처럼 가늘어지고 있다.

진정한 좌파를 건설하려는 사람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은 램지처럼 한 발은 스파이 세계에, 다른 발은 노동당 우파에 담근 자들이 했던 구실을 보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동당의 대안을 건설한다는 것은 영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 좌파는 착취와 지배의 국제적 체제인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제국주의는 영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의 근간이기도 하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엄청난 규모와 강렬함(지난 금요일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파업들을 보라)에서 우리는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잠재력을 엿볼 수 있다. 썩어 빠진 노동당 우파를 끝장낼 방법은 바로 거기에 있다.

번역 김종환

삼성전자 DX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성과를 배분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보상 격차 해소 요구하는 삼성전자 DX 노동자들

사용자·정부·법원·언론의 총공세 속에서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은 상당한 성과급을 따냈다. 그러나 삼성전자 사용자 측은 성과주의를 끝까지 완강하게 고수해, 삼성전자 노동자들 사이에서 성과급 격차가 크다.

반도체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의 성과 격차가 상당하다. 특히, 비반도체 부문인 DX(휴대폰, 가전 등) 노동자들은 매우 적은 보상만 받았다. (기존 제도에 따른 성과급 외) 이번 역대급 영업이익에 따라 비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이 받은 성과급은 600만 원가량이다. 메모리 반도체 노동자들의 100분의 1 수준이다. 그래서 DX 부문 노동자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이제까지 삼성전자는 휴대폰·가전 등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반도체 투자에 사용해 왔다. 투자할 때는 사업 부문을 넘나들더니 막상 노동자 성과급 배분에서는 사업 부문별로 성과주의를 강요한 것이다. DX 노동자들은 “과거 DX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도체 투자 재원으로 활용됐던 것인만큼 지금의 성과 역시 DX의 기여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DX 부문 대표(노태문)가 노동

자들의 불만을 달래겠다며 사과문을 올린 것이 부아를 돋웠다. DX 부문이 성과를 내기 위해 “원가 구조와 사업 운영 방식”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과 압박 구조조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도 DX 부문 노동자들은 행동하기 시작했다. DX 부문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동행 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동행노조)의 조합원 수는 2,000여 명에서 최근 2만여 명으로 성장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도 1만 5,000명에서 2만여 명으로 늘었다.

현재 동행노조와 전삼노는 사용자 측에 보상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사용자 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10일부터 ‘준법 캠페인’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직원 연봉계약 체결을 미뤄 달라는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잠정합의안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 판단까지는 합의안에 따른 연봉 지급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합의에서 보상이 배제된 DX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반면, 합의안

을 지지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불편하게 느껴질 듯하다.

타협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의 의의는 크다. 지배계급 전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파업을 위협해 특히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이 상당한 임금 인상을 따냄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올렸다.

안타깝게도 노조 지도부는 지배계급의 총공세에 직면해 두려워서 타협했다. 신생노조가 마주한 지배계급의 총공세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타협 때문에 올해 투쟁에서 DX 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전삼노와 동행노조는 이번 투쟁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1퍼센트(1인당 2,700만 원)를 동등하게 나누자는 안을 교섭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초기업노조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용자와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교섭 요구를 제기하기가 부담스러웠던 듯하다. 또,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의 반발도 우려했을 것이다.

그러자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지도부에 불만을 제기하며 5월 초에 공동 투쟁본부를 탈퇴했다. 불만은 이해가 되지만, 파업을 앞두고 공투본에서 이탈하는 것은 DX 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서도 효과적이지 않았다.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도 이런 행동을 굽지 않은 시선으로 봤을 것이다.

그러자 매스 미디어가 노동자들을 DX 부문 노동자들의 불만을 부각시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이간질했다.

초기업노조 지도부가 처음부터 DX 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안고 함께 힘을 모아 싸우는 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몫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 과정은 사용자 측이 강요하는 성과주의와 부문 간 성과 격차에 맞서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단호함이 필요했음을 보여 줬다.

현재 DX 노동자들이 투쟁의 화살을 사용자 측을 향해 겨누는 것은, 노동자들 간 반목과 갈등을 지속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다. 이 노동자들의 투쟁도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란다. DX 부문 노동자들의 보상 격차 해소 투쟁에 초기업노조도 연대와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선영

이익공유제 논란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 투쟁에 해롭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촉발된 ‘초과이익’ 배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중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합원 투표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5월 27일 닷새 뒤인 6월 1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막대한 초과이익 분배 방안에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익의 공유가 원칙 정규직에만 한정되는 게 옳은가. 협력업체가 동반 성장하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말이다.

그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미 ‘이익균점’을 말하며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 합의된 배분 규칙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김영훈 장관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은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이후 다른 대기업들로 퍼지는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제도화’ 요구를 다른 쟁점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배분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퍼 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다.(이런 점에서 진보당·정의당이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기간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내놓은 것도 노동자 투쟁을 분명하게 지지하기를 회피하려는 용도였다.)

투쟁 지지 회피

그러나 재계와 국민의힘은 김영훈 장관의 제안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경총은 특별권고를 통해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해당하므로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도 재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훈 장관이



이익공유제는 계급 간 착취 문제를 자본 간 이윤 배분 문제로 쟁점 돌리기 하는 것이다

토론회 계획을 밝힌 지 이틀 뒤인 5월 2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이익 공유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경쟁적 자본 축적이 핵심 특징인 자본주의 체제를 가장 잘 대변하는 입장이다.

결국 노동부는 6월 1일로 계획했던 토론회를 연기했다. 재계 측 토론자를 구하지 못해서라고 했다. 대기업들은 성과급 인상을 통해서든, 이익 공유를 통해서든 이윤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도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가, 재계의 반발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김영훈 장관의 주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 격차가 줄어들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소득도 궁극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노동운동과 진보 정당들도 김영훈 장관의 이런 논리에 공감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수탈에 맞서 이해관계가 같다는

생각은 현실 앞에 무기력하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 중소기업들도 대기업 못지않게 이윤 늘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들을 쥐어짜 왔다. 그들이 대기업 이익 일부를 분배 받는다고 해서 자기 노동자들의 임금을 알아서 올려 줄 리 만무하다.

실사 초과이익공유제가 입법되더라도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들을 강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노동부는 “정부가 기업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이나 계획은 없다”며 “원·하청 간 상생과 노동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런 ‘자율’ 시행은 거창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초과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성과공유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득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 적은 없다. 2004년 포스코가 처음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지만, 포스코는 대규모 사내 하청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산재를 방치하며, 노동자들을 악랄

초과이익공유제에는 원하청 기업 모두의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어, 대기업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해롭다

하게 쥐어짜는 기업이다.

초과이익공유제가 만에 하나 의무화되면 대기업은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더 낮게 계약하고, 대신 그 일부를 ‘성과공유’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초과이익공유제가 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또, 원하청 기업 모두의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 노력에 협력해야만 중소 하청 기업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담고 있어, 대기업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이익공유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제하고 계급 협조주의를 퍼뜨리는 데 이용됐다.

예를 들어, 1930년대 프랑스의 중간 계급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정당 급진당도 ‘이윤 공유제’를 내걸었다. 당시 프랑스에서 노동자 투쟁이 거세지자 계급 투쟁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이 더 급진적인 대안으로 이끌리는 것을 막고자 제안한 것이다. 문제는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이 이런 급진당과의 민중전선 정부를 유지하려고 거대한 노동자 공장 점거 물결을 잠재우는 데 힘을 쓴 것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실효성도 없고 계급 협조주의를 퍼뜨려 개혁 정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계급의 대안은 임금 인상 투쟁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 모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강동훈

‘상생’이라는 이름의 계급협조 노동자와 중소기업은 대기업(독점)에 맞서 같은 편인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도록 제도화하지는 발상은 오래전부터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돼 왔다. 재벌이 단가를 후려치고 기술을 탈취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 몫의 일부를 협력사에 되돌리자는 제안은 직관적으로 정의로워 보인다. 이 구상은 2011년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이후 문재인 여당의 협력이익공유제 등으로 변주되며 거듭 정책 의제가 됐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좀처럼 검증되지 않는 전제가 깔려 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맞서 같은 편이라는 가정이다. 이익공유제는 이 가정을 자금 흐름으로 구현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가정은 마르크스주의적 좌파가 이미 반세기 전에 해체했던 낡은 논리의 재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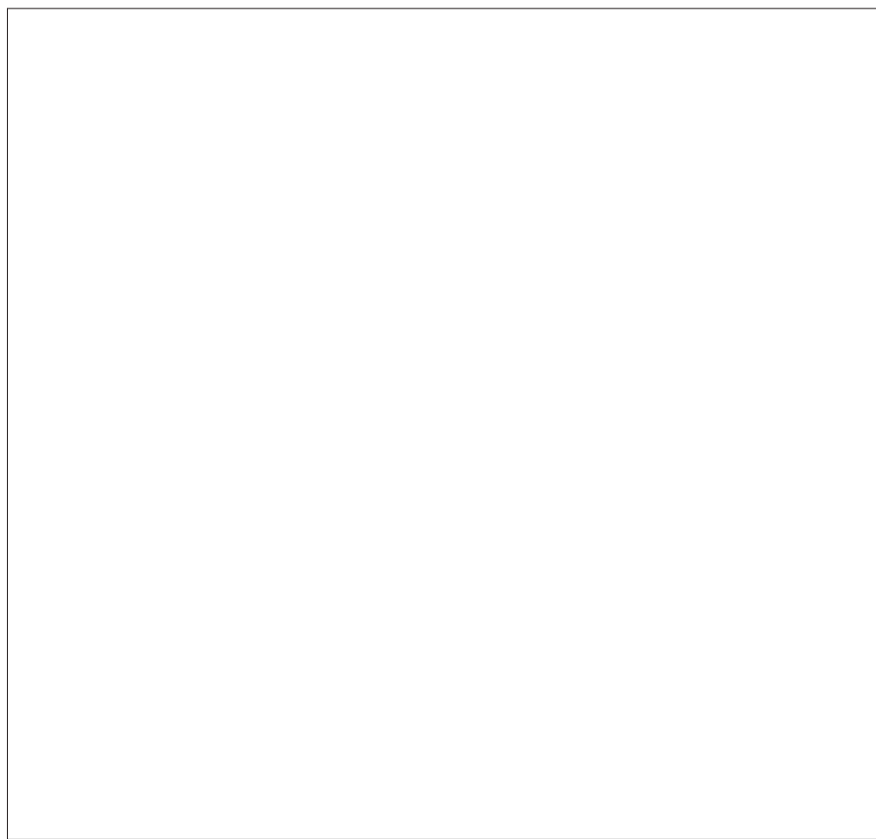
‘반독점동맹(민중전선)’

이 가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스탈린주의 공산당의 공식 경제 교리였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하 국독자론)이 그 원형이다. 이 이론은 사회의 근본 모순을 자본과 노동 사이가 아니라 소수 독점체와 전체 민중(노동자, 중간계층, 중소기업) 사이로 재배치했다.

여기서 ‘반독점동맹’ (민중전선) 전략이 도출됐으며, 그 동맹의 접착제는 독점의 폐해에 맞서 계급을 초월한 국민적(“민중”) 투쟁이었다.

가장 노골적인 정식화는 프랑스 공산당 이론가 클로드 갱이 1975년 《공산주의 연구》에 기고한 글의 제목인 ‘임금노동자와 중소기업: 다르지만 수렴하는 이해관계’였다. 이는 오늘날의 이익공유제 담론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기업이 내놓은 이윤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가운데)은 계급간 분배 문제를 계급내 분배 문제로 만들고 싶어 한다

해관계는 다르지만 거대 적 앞에서 수렴한다는 논리다.

이 논리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 자크 발리에르가 책임 편집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지 《정치경제학 비판》이었다. 이 저널이 겨냥한 핵심 표적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이해가 수렴한다는 (포퓰리즘적) 명제였다.

모순 바꿔치기 마술

이 비판의 핵심은 단순하다. 근본적인 적대 관계는 대자본과 소자본 사이가 아니라, 자본과 임금노동 사이에 존재한다.

중소기업도 자본이다. 잉여가치를 착취해 이윤을 창출한다. 오히려 단가 압박과 낮은 노조 조직률 탓에 협력사 노동자가 더 강하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대기업 대 중소기업·노동자’라는 전선 설정은 이러한 착취 관계를 자본 내부의 규모 갈등으로 치환한다. 적대의 진정한 축을 은폐한다.

이익공유제는 이러한 구도 전환을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자금의 이동 방향을 보면 명확하다. 분배는 대자본에서 노동으로가 아니라 대자본

에서 소자본으로 향한다. 이전된 몫을 일차적으로 수취하는 주체는 협력사 노동자가 아닌 협력사 기업주다. ‘이해관계의 수렴’이라는 전제는 분배의 계급적 성격을 흐린다. 대기업이 내놓은 이윤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노동자와 기업주를 한 배에 태운다

정치적 효과는 더욱 결정적이다. 이익공유 담론 속에서 협력사 노동자의 적은 자신을 직접 착취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갑질하는 대기업’이라는 축소된 존재가 된다. 노동자는 기업주와 한편으로 호명된다. “우리 회사가 단가를 제대로 받아야 우리도 산다”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이 순간 분배 갈등은 일터의 노사 대결에서 기업 간 거래나 정책 위원회의 조정 문제로 옮겨 간다. 노동조건을 둘러싼 직접적 투쟁의 동력이 ‘동반성장’이라는 협상 테이블에 흡수돼 해체되는 것이다. 이것은 계급 협조다. 프랑스의 혁명적 좌파가 반독점동맹 전략을 비판하며 지적한 핵심도 이 지점

이다.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자본가 계급 일부와의 동맹에 종속시키면, 결국 노동자의 독립적 행동은 억제되고 전투성은 무너진다.

체제에 면죄부를 준다

이익공유 구상은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재벌과 국가가 스스로를 ‘개혁 가능한 선의의 파트너’ 행세를 하게 해 준다. 착취는 ‘불공정 거래’로, 계급적대는 ‘동반성장’으로 치환된다.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가 일부 대기업의 도덕적 일탈로 축소되고, 그 일탈을 바로잡으면 체제는 정당화된다는 이데올로기가 근거에 놓인다. ‘상생’은 결국 계급 평화의 코드네임이다.

진짜 경계선이 어디인지 묻는다

대안의 출발점은 전선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이다. 노동자를 결속시킬 요구는 자본 간 이익 재분배가 아니라 원·하청을 가로질러 노동자를 단결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직접 고용,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하청·협력사 노동조건 개선이 그 핵심이다. 분배는 자본 사이가 아니라 자본에서 노동으로 향해야 한다. 이를 강제하는 힘은 위원회 합의가 아니라 계급적으로 독립된 노동자 조직과 투쟁에서 나온다.

공산당들의 국독자론과 반독점동맹 경험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그 계급 협조주의 이론과 전략은 노동자를 강화하기는커녕 무장해제시킨다. 이 도식은 “공산당이 노동계급을 협소하게 가두고, 통합적 요구를 정식화하지 못하게 했으며, 계급투쟁을 선거 산수로 환원시켰다.”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이해가 수렴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이익공유 담론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노동자를 자본의 일부와 화해시키는 대가로, 맞서야 할 진짜 상대를 시야에서 사라지게 한다.

성과급과 고용 안정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카카오 노동자들

카카오 노동자들이 6월 10일(수) 4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화섬식품노조 주최로 11시 30분 판교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5개 법인 소속 노동자들이 진행한다.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별칭 '크루 유니언')는 설립 때부터 본사와 계열사 전체를 포괄하는 노조로 출범했다. 이번 파업은 본사와 계열사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는 첫 파업이다.

카카오지회는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로 “매각,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 체계 개선” 두 가지를 꼽았다.

고용 불안

사용자 측은 포털 ‘다음’을 분사하면서 “매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매각을 단행했다.

5월 28일 지회는 엑스엘게임즈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는 카카오 서비스 품질 관리를 하던 자회사 디케이테크인과



5월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카카오 노동자들의 결의대회

지난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디케이테크인에서는 권고사직이 진행됐다.

카카오는 지난 2년 동안 계열사별 150개에서 94개로 줄였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한편, 장시간 노동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는 카카오 본사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을 적발했는데, 2021년 근로감독에서도 적발된 것이 반복된 것이다.

카카오지회는 역대급 실적에 경영진은 성과급 파티를 벌이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 대표 정신아의 보수는 13억 6,100만 원이고, 상여금만 5억 400만 원이다. 반면 노동자들이 받은

성과급은 연봉 대비 3~9퍼센트에 불과했다.

미래 성장 동력?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의 총 규모는 ...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에게 줄 돈은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 해소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파업은 안 된다며 “서비스 안정성을 지키는 일은 카카오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회사는 카카오 품질관리를 해 온 자회사 디케이테크인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10년 이상 서비스 안정성을 지탱해 온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처지로 내몰고 서비스 불안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행태는 적반하장이다.

만약 서비스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 사용자 측에 있다.

현재 일부 업종은 호황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자본가들은 불안해한다. 이 와중에 IT 기업들은 AI 경쟁 심화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압박 속에 자본가들은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에도 나섰다.

자본 간 경쟁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지우면서 투쟁이 벌어지는 양상은 카카오뿐 아니라 삼성전자 투쟁에서도 봤던 것이다.

카카오지회는 “추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강한 사용자들에게 전면 파업을 압박해 양보를 받아 낸 삼성전자 노동자들처럼 카카오 노동자들도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안형우

타워크레인노조

닷새 파업으로 임금 8퍼센트 인상 얻어내다

5월 27일(수)부터 전국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파업에 들어갔던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정부·사용자측과 잠정 합의를 체결하고 5월 31일(일) 오전 8시 파업을 종료했다. 6월 9일에 잠정 합의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심각한 건설업 불황으로 1년가량 일하고 나면 2년가량을 일 없이 대기해야 하면서 생계비 위기를 겪어 왔다.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은 임금 15퍼센트 인상, 주 40시간 노동과 타워크레인 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으로 전국에서 가동되고 있던 타워크레인 2,100대 중 1,800대가 멈춰 섰다(85퍼센트).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공장들을 건설하던 현장의 타워크레인들도 멈췄다. 산업 인프라와 각종 건물 건설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 온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힘이 언뜻 드러났다.

파업이 효과를 내자 사용자뿐 아니라 정부도 직접 협상에 나섰다. 투쟁의 도미노를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방금 전에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 돌입을 간신히 막아냈다. 노조 지도부는 사용자·국토교통부

와의 협상을 앞두고 점거 중이던 타워크레인에서 일단 내려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지시했다.

노조 지도부는 임금을 총액 대비 8퍼센트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정하는 타워크레인 표준시장단가의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업을 통해 임금을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다만 이 임금 인상은 2028년 1월부터 적용된다. 통상적인 적용 시점보다 반년 미뤄지는 것이다. 또,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약속이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목소

리도 나온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불황기 산업에서도 파업을 통해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한편, 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도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협상이 결렬되면 6월 8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 건설에 또다시 차질을 줄 수 있다. 노동자들이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정선영

스타벅스의 5.18 모욕은 국제 파시스트의 '개 호각' 수법

(도그 휘슬)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항쟁 모욕은 거센 반발을 받았다. 대중적 불매로 1주일 만에 매출이 84억 원 급감했다.

스타벅스코리아(와 모기업 신세계)의 사과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떨공' 정용진은 미국 극우 찰리 커크가 방한 연설한 집회 '빌드업 코리아'에 무료 커피 트럭을 보낸 자다.*

'탱크 데이' 이벤트는 그저 지질한 장난이 아니라 지지층 결집 의도가 뚜렷한 정치 전술이었다.

극우 함의가 있는 은어를 공적 발화에 은밀히 끼워넣는 이 수법은 '개 호각(도그 휘슬)'이라고 불린다. 사람은 못 듣고 개에게만 들리는 고주파 호루라기에 빗댄 이름이다.

개 호각의 은밀함은 극우가 비판과 처벌을 피하면서도 반동적 정치가 담긴 발화를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 있게 해 준다. 극우는 코드에 반응하는 동료를 식별하고 고무된다.

반동적 대중 운동을 건설하고자 하는 파시스트들에게 개 호각은 세를 확인하고 결집시키는 신호로 기능한다.

그래서 개 호각은 국제 극우·파시스트들의 단골 수법이다. 미국 극우운동 '마가(MAGA)'와 연계가 깊은 정용진은 심층팔구 그들에게서 이 수법을 배워왔을 것이다.

돌격 신호

개 호각의 선구자는 프랑스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FN, 현 국민연합(RN)의 전신) 지도자 장마리 르펜이다. 르펜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나치가 처한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려고 나치 이미지를 세탁하고 선거에 참여했다.

르펜은 개 호각을 이용해 여느 우파 정당인 양 행세하면서도 파시즘의 진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결집

배경 설명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는 시온주의 기업이다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이벤트를 비난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스타벅스 자신도 2023년에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한 스타벅스 노동조합을 고소해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규탄을 받고 있다.

스타벅스 창업주 하워드 솔츠는 강경 시온주의자다. 솔츠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테러"로 매도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재정적으로 적극 후원해 왔다. 이스라엘은 그 '공로'를 인정해 솔츠에게 '건국 50주년 공로상'을 수여했다.

호를 보냈다. 그런 개 호각에는 "프랑스다움 지키기" 같은 수사도 있었지만, 훨씬 역겨운 모욕도 수두룩했다.

1988년에 FN의 홀로코스트 부인론이 비판을 받자, 르펜은 유대인 장관 미셸 뒤라푸르의 이름을 가지고 "오래타는 화장터"라는 역겹고 다소 노골적인 개 호각을 불었다(프랑스어로 '뒤라'는 '오래 간다'는 뜻이고, '푸르'는 '오븐'이라는 뜻이다).

그 후 르펜은 FN의 유대인 혐오를 비판한 유대인 가수 패트릭 브뤼엘을 "나중에 우리가 상대할 무리 중 하나"로 지목했다. 얼핏 무난해 보이는 이 말은, "무리"라는 단어를 "화덕"과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골라 쓴 개 호각이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주류 정당들 자신이 르펜의 인종차별적 주장 일부, 특히 이민자·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주장과 언사를 갖다 썼다. 이는 다시 파시스트들에게 기회가 됐다.

이와 유사한 일이 유럽 전역에서 벌어졌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극우가 주류화했다.

혐오표현 규제 법률은 별무소용이

ICE의 '개 호각'

"Absolute Boys"

(최고의 녀석들)

극우 프로파간다에 쓰이는 표현

"Foreign Invaders"

(외국인 침략자들)

이민자가 백인을 몰아낸다는 음모론

"Which Way, American Man?"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미국 남성들이여?)

백인 국가주의자들의 슬로건



였다. 개 호각은 바로 그것을 피하려 설계된 수법이다.

무엇보다 그 법을 집행하는 국가 자체가 공정한 심판자가 아니었다. 표현 규제법은 유럽 각국 정부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유대인 혐오' 재갈을 물리는 데에나 쓰이기 십상이었다.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는 개 호각의 명수다. 트럼프는 권력층에 맞선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며 극우 운동 MAGA를 일으켰고, 온갖 개 호각이 담긴 선동을 해냈다. 극우는 그 선동으로 힘을 얻고 트럼프가 제공하는 발언대를 이용해 온갖 반동적 정치를 쏟아냈다.(관련 기사 본지 579호 '트럼프, 파시즘, 국가')

트럼프의 '돌격대' 이민세관단속국(ICE)도 개 호각 불기 전술을 자주 구사한다. ICE는 미국 극우들이 생산한 이미지와 구호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대원을 모집한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14개 단어로 이루어진 슬로건을 내세운다는 점에 착안

해 모집 광고 문구를 14개 단어로 구성한다든가, 국수주의 극우의 대표적 슬로건인 "전통과 국토의 수호자"라는 광고 카피를 쓰는 것이 그런 사례다.

이런 개 호각은 '프라우드 보이시' 같은 진짜 파시스트 단체들이 활개 칠 기회를 줬다. '프라우드 보이시'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후 수사로 중앙 지도부가 와해됐었지만, 이제 ICE의 "집행자" 구실을 자처하며 활동과 조직망을 재건하고 있다.

이번에 스타벅스코리아의 개 호각이 들통나 광범한 지탄을 받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용진이 극우임을 알았던 덕분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극우 본색이 덜 알려진 자들도 얼마든지 개 호각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런 자들의 역겨운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 폭로는 극우를 고립시키고, 반동적 정치가 지역 사회와 학교, 일터에 뿌리 내리는 것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집단적 투쟁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

김준호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QR code

- ▶ 공개 토론회 영상
-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 ▶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70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중국 탄광 참사

제국주의적 패권 경쟁과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가 낳은 구조적 재난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5월 22일 중국 산시성(山西省) 친위안현 탄광에서 발생한 사고는 탄광 사고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이 벌어진 거대한 인재였다. 이 사고로 8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28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2009년 헤이룽장성 신싱 탄광 사고 이후 가장 큰 참사다.

사고 초기에 친위안현 당국은 광원 247명 중 201명이 무사히 대피했고, 8명만 사망했으며, 38명을 구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거짓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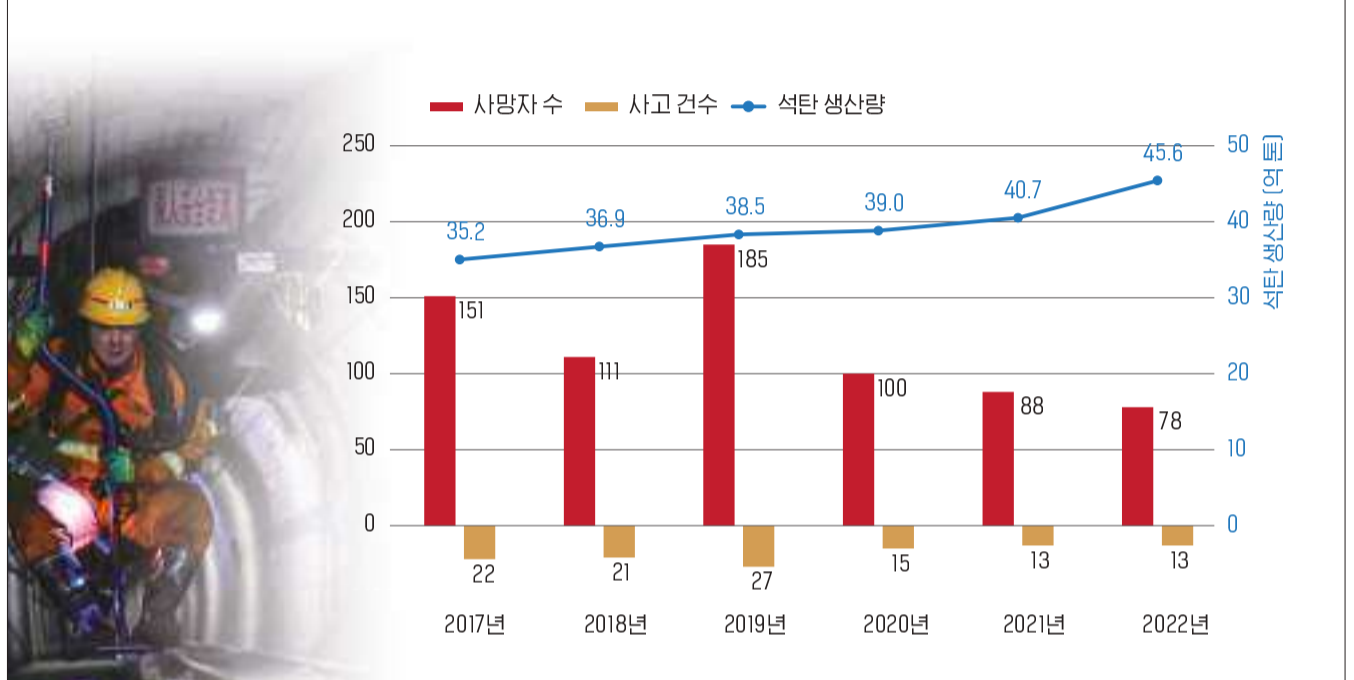
구조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났다. 광원들의 출입 기록은 실제와 달랐고, 이들이 착용한 위치 추적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갱도에 투입된 247명 중 123명은 안면 인식 출입 기록 장치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다.

탄광 측이 제공한 설계도에는 없는 터널 두 개도 발견됐다. 불법 채굴이 벌어진 것인데, 이 현장에서 일한 광부들은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면 인식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원들의 안전 장비도 부실했다. 산소호흡기는 중국 안전 규정상 30분 이상 작동해야 하지만, 7~8분 만에 산소가 바닥났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0년 이후에도 크고 작은 탄광 사고가 거듭됐다. 2020년대

중국의 석탄 생산량과 사고 건수, 사망자



만 해도, 2021년 신장웨이우얼자치구 탄광 침수 사고(21명 사망), 2023년 네이멍구자치구 노천 탄광 붕괴(53명 사망), 2023년 산시성의 사고 64건 등.

중국에서 탄광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주석 시진핑은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지시했다. 그러나 탄광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석탄에 대한 의존

계속되는 탄광 사고는 중국 정부가 2000년 이후 급속히 확장하는 산업 부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석탄 시장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 있다. 아울

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석탄 광산 수천, 수만 개를 개발하고 허가했다. 중국 석탄 생산의 80퍼센트는 네이멍구자치구와 산시성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류선위 탄광 사고를 비롯해 이 지역에서 탄광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현재 중국 에너지원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51.4퍼센트다. 2000년대 초반 70퍼센트에 비하면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중국 화석연료 발전소의 90퍼센트 이상이 석탄 발전이다. 겨울철 난방도 대부분 석탄을 사용한다.

중국은 석탄 매장량이 풍부하고 석탄 가격도 석유의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석탄 의존도가 높다. 천연가스 발전은 대도시 전력 피크 수요에 대응하는 보조 수단에 그친다.

류선위 탄광 사고 직후 온라인 토론방의 한 중국인 참가자는 이번 사고는 중국이 사회주의(고급 단계가 아니라)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의 주장대로 중국이 모종의 사회주의(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면, 광산업은 이윤 추구보다 인민의 생명을 우선해야 했다. 광원들의 산업 안전과 보건에 더 많이 투자했어

중국 당국의 주장대로 중국이 모종의 사회주의라면 광산업은 이윤 추구보다 인민의 생명을 우선해야 했다

야 했다는 뜻이다. 나아가 국가 정책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청정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진핑은 2020년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중국이 2030년에 탄소 피크에 도달하고 206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쌍탄소' 목표를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을 늘리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핵심 공급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최근 다시 석탄화력 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국 도시에 준비한 전기자동차와 천문학적 규모의 풍력·태양광 발전 설



무시무시한 가스 폭발이 산시성의 갱도를 휩쓸었다. 폭발 당시의 CCTV 영상

이탈리아 기층 노조들, 또다시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에 나서다

5월 29일 금요일 이탈리아의 기층 노조들(주류 노총들 바깥의 전투적 노동조합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과 전쟁, 전시 경제로의 개편에 반대하고, 임금 대폭 인상, 물가 연동 임금제 등을 요구하고, 정부의 파업권 제약 시도에 맞서는 파업이었다.

이번 파업은 이란 전쟁으로 생계비 위기가 격화된 이래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가장 큰 파업이다.

이날 파업에는 시코바스(SI Cobas), '기층 노조 연합'(CUB), '일반 기층 노조'(SGB), '이탈리아 노동조합'(USI), '노동자 권리 협회' 등 이탈리아의 거의 모든 기층 노조가 참여했다.(또 다른 주요 기층 노조인 USB는 이스라엘의 가자 구호선단 나포에 대응해 5월 18일에 따로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물류, 철도, 대중교통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전국 철도편의 40.3퍼센트가 취소됐다.

밀라노에서는 대부분의 지하철이 필수 운행 시간대를 제외하고 운행이 중단됐다. 주요 물류 센터들이 봉쇄됐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군수 물자를 취급하는 DSV 물류 센터도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 봉쇄됐다.

밀라노의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스칼라에서는 극장 기술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거나 차질을 빚었다.

토리노에서는 식품 기업 피오렌

티니의 공장 앞에서 불법 파견과 끔찍한 노동 조건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군수 기업 레오나르도의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만나 서로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기층 노조 연합'은 이날 이탈리아 전역 50여 곳에서 행동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파업은 '필수 공익 사업장' 파업 제한을 물류 부문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맞선 파업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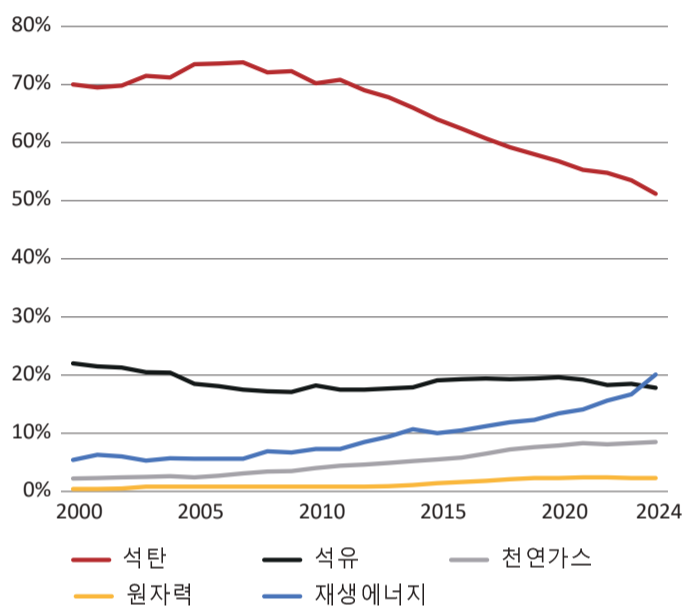
지난해 가을 팔레스타인 연대 총파업을 성사시키는 데서 결정적인 구실을 한 물류 부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요구를 팔레스타인 연대, 전쟁 반대 등의 정치적 요구와 결합시키고 투쟁적인 행동을 벌이는 데서 앞장서 왔다. 이 노동자들의 많은 수가 시코바스로 조직돼 있다.

나폴리에서는 시코바스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성 해고에 항의하는 집회를 중심으로 행동이 벌어졌다.

시코바스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하는 혁명적 좌파인 '혁명적 국제주의 경향'(TIR)은 이번 파업과 시위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며, 파업의 규모는 이탈리아 "전체 임금 노동자 1,500만 명에 비하면 제한적"이지만 멜로니 정부와 사용자들에 맞서 "단결된 행동을 계속 건설할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웅

중국 에너지 소비 비중 추이



비를 보면 중국이 청정 에너지 국가로 전환하는 듯하지만, 이는 착시일 뿐이다.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는 중국이 '전기 국가'(electrostate)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그 부상에서 핵심 구실을 한 것은 바로 석탄이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에서 셰일 가스가 한 구실과 비슷하다.

중국 당국은 2024년에 94.5기가와트(GW)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포함해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대규모로 승인했다. 이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건설이 감소하던 추세와 대조된다. 또한 네이밍구 자치구와 산시성, 간쑤성 등지에서 석탄 채굴 허가도 대규모로 이뤄졌다. 중국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을 선호하면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폐기도 지연되고 있다. 2020년에는 13기가와트가 폐쇄됐으나 지난해에는 2.5기가와트로 급감했다.

경쟁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의 중국 분석가 치친은 "중국의 2030년 및 2060년 기후 목표로 인해 정책적 여지가 좁아지기 전에 석탄 관련 이익 집단들이 빠르게 [석탄 생산의] 성

장을 확보하려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들이 에너지 안보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석탄 발전 용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정당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등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AI) 경쟁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폭증은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도 석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자극받은 트럼프는 "나의 행정부가 즉시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을 사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하도록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당국은 경제 성장 둔화와 석탄 채굴 제한 시 우려되는 실업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필요성 때문에 석탄 의존을 다시 높이고 있다.

이번 탄광 사고는 소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의 관리·감독 부실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제국주의적 패권 경쟁과 이윤 추구를 앞세운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재난이다.



사진출처 CUB



중동 위기 속 이스라엘은 미국의 대체불가능한 동맹이자 커지는 골칫거리다. 폭격당한 레바논

레바논 변수에 갇힌 미국의 이란 전쟁 출구 전략

최근 6월 1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 수위를 높이자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4월 2일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휴전 조건에는 레바논 휴전도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 "빌어먹을 미친 놈아"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엑시오스))

이후 트럼프는 네타냐후에 대한 욕설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채, 네타냐후 및 헤즈볼라와 "생산적 대화"를 나눴으며, 곧 전투가 멈출 것이라고 SNS에 올렸다.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미국의 대통령이 헤즈볼라 지도부와 통화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만큼 트럼프는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의 통제력이 예전만 못한 상황을 보여 준다. 사실 전 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격성도 미국 통제력 약화의 이면이다.

이스라엘은 2024년 10월 레바논 저항 세력 헤즈볼라와 휴전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수도 베이루트를 포함해 레바논을 꾸준히 폭격해 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는 이스라엘에게

"Ceasefire(휴전)"는 "You cease, I fire.(너는 멈추고, 나는 쏜다)"라는 뜻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2월 말 미국과 함께 이란 침략 전쟁을 개시하며 레바논에서도 일방적으로 전쟁을 재개했다.

이후 지금까지 레바논인 사망자는 3,400여 명, 부상자도 1만 명이 넘는다.

이번주 이스라엘은 26년 만에 레바논 남부 가장 깊숙히 점령해 들어갔다.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 남부를 점령했다가 완강한 저항 때문에 2000년 철수했다.

트럼프의 공언과 달리 레바논인들의 비극은 금세 끝날 것 같지 않다.

네타냐후는 이후에도 헤즈볼라가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베이루트와 레바논 남부를 공격한다는 계획에 "바

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구호선단 활동가들에 대한 가혹 행위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던 극우 안보장관 벤그비르는 "지금은 미국에 '노'라고 말해야 할 때"라며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숙적인 이란과의 전쟁으로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쟁과 테러를 더 지속할 이해관계가 있다.

사실 미국에게는 이스라엘을 저지할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 당장 이스라엘에 무기와 자금 지원을 끊으면 된다. 전쟁 3년 차인 이스라엘은 경제가 엉망이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휴전'을 강요하며 누가 주인이고 누가 경비견인지를 전 세계에 확인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은 욕을 퍼부으면서도 지원과 지지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으뜸가는 강대 국가로 남는 것이 미국의 중동 패권 유지에 이롭다.

그래서 일시 휴전이나 철수가 벌어지더라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자체 압박은 아랍의 친미 동맹국들의 요구를 의식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스라엘 압박은 그 둘의 공통된 적국인 이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라는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 최근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지속에 분노를 표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이스라엘 북부 폭격을 경고했다.

이란은 레바논과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이를 알면서도 트럼프가 이란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제하려 한 것은 그만큼 출구 찾기가 다급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 역설적으로, 호전적인 전쟁 국가 이스라엘의 존재와 호전성이 미국에게 더욱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아니라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테러리스트다